

각국의 2015년 노동시장 전망과 주요 정책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세계 각국은 저조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선진국 경제와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5년에는 노동시장의 양적인 문제는 완화되는 전망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기 동안 누적되어 온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으며, 향후 각국의 경제·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중국 경제의 성장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과 고용지표를 달성하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것처럼 보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최근 경제성장과 고용지표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2015년 노동시장 전망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에서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5년의 경기침체 기간을 보내면서 2014년에야 비로소 고용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대침체(Great Recession) 이전으로 회복되었는데, 그 회복 속도는 매우 느렸으며 최근에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노동시장의 지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술 미스매치로 인한 노동시장의 문제점은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중

산층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하락하여 소득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州)별 최저임금 인상이나, 교육격차 해소, 국가 인력개발프로그램(WIOA)의 재승인, 늘어난 장기실업자 구제를 위한 'Ready to Work Partnership' 프로그램의 추진 등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을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의 고도성장으로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신상태(新常态, New Normal)'라는 용어로 정의되는 새로운 상황은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기를 지나 고효율, 저비용, 지속 가능한 성장의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고용지표는 여전히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른 서비스 부문의 고용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인구구조의 장기적 변화가 이미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2012년부터 중국의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현재 대졸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청년층의 취업난은 심각하고, 저숙련 중장년층의 취업 어려움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별 격차 확대와 노동자의 집단행동 증가 등 노동시장에 있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최근 유럽의 다른 국가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노동시장도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양적인 지표의 향상은 저임금, 불안정, 임시직 일자리의 확산이 동반된 것으로 비정규직 취업자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독일은 안정적인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 미스매치에 의한 인력수급의 괴리, 지속적인 장기실업의 존재,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가 노동시장의 문제로 지적된다. 독일은 노사자율주의에 입각하여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르츠 개혁으로 나타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법정최저임금을 도입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고, 프랑스의 경우 그동안 금지되었던 일요일 노동의 확대 시행과 기업의 집단해고 요건 완화가 최근 노동시장 정책의 주요 이슈로 지적된다.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일본의 경우 고령자 증가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서 대기업 고용자는 일관되게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 고용자는 감소하는 추세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기업 고용자 증

가는 비정규직(파트타임, 파견, 계약직)의 확대가 동반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에는 여성 고용률 증가를 위한 고용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진국의 2015년 노동시장 전망은 양적으로는 회복 또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데,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과 유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비정규직의 증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등)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관련 정책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용의 양적인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경기가 침체로 이어져서 고용지표의 악화가 발생한다면 노동시장 정책의 우선 순위를 고용의 양적인 성장에 맞추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부 재정적자 문제, 가계 부채 증가 문제, 복지 재원 증가 문제 등 정부 재정투입의 우선순위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 투입과 함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정책 우선순위의 앞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단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KLI**